

종합

PRT 120명·보호병력 350명 아프간 파병

(지방재건팀)

국방부는 다음 달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 안을 국회에 제출할 다음 현지 정밀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아프간 파병 스케줄'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국방부가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출하고 현지에 군 자체 정밀실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라며 "파병지역은 군 정밀실사단이 후보지를 방문한 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병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정부는 아프간 지방재건팀(PRT)과 보호병력 규모와 관련,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PRT는 120

정부 '동의안' 정기국회 회기 내 제출 내주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

명, 보호병력은 350명 내외에서 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PRT 인원은 기존 130명에서 120명으로 줄이고 보호병력은 300명 선에서 맞추되 50여명 가량이 유동적"이라면서 "어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대략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관련 부처 간에 세부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파병부대에 해병대원 20

여명 가량을 포함하되 부대원 식사와 세탁 등은 민간업체에 맡기고 취사병과 세탁병은 보내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기로 국방부와 협의했다"며 "국방부가 파병동의안이 준비되는 대로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아프간을 방문했던 정부합동실사단은 국제안보지원군(ISAF)과 미군, 아프간정

부에 대해 우리 군 병력의 임무가 자체 방어 및 PRT 요원의 활동 경호, 자위권 행사에 한 정될 것임을 명확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프간과 ISAF측은 이해를 표시했으며, ISAF측은 "한국의 PRT가 미래지향적인 신모텔"이라고 평가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NATO와 협의해 구체적인 파병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설명하고 파병동의안을 제출한 뒤 PRT 및 보호병력의 주둔지를 확정, PRT 기지 건설과 파견인력을 선발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지 교민과 사업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업체별,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협뉴스

시설

철도노조, 지금이 파업할 때인가

철도노조 파업이 이를째를 넘기면서 경제적인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여객 수송은 파업이 제한되는 필수 유지 업무라서 그나마 차질이 덜하지만 철도화물수송은 평상시의 7%에도 미치지 못해 타격이 크다. 평소 62회에 달하던 광주·전남지역 화물열차 운행횟수는 광주가 2회, 전남은 4회로 대폭 줄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 대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우리는 코레일 노사가 주장하는 파업 불입의 시비를 따지고 싶지 않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돼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두바이 모라토리엄'이라는 예까지 못한 약재를 만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물류 수송의 중추인 철도가 마비된다면 우

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코레일 노조는 이번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공익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특혜만 파업을 벌임으로써 자신들의 이기적인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태를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올 들어서만 벌써 3번째 파업이지 않은가. 지금은 파업을 벌일 때가 아닌 것이다. 국민이 외면하는 노동운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코레일 사측도 여론을 등에 업고 법과 원칙만을 내세우며 노조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안 된다. 노조의 요구가 아무리 무리해도 인내심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파업이라는 최악의 국면은 피해야 했다.

코레일 노사는 당장 파업을 끝내고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와 경제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두바이'發 제2금융위기 안되게 대비해야

'사막 위의 기적'으로까지 불리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가 사실상의 모라토리엄(채무상환유예)을 선언했다. 두바이가 정부 소유 최대 지주회사인 두바이월드(채무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달라고 채권단에 요청했다. 두바이월드의 채무 593억달러는 800억달러로 추산되는 두바이 전체 채무의 4분의 3에 가깝다. 겨우 회복기에 접어든 글로벌 경제에 '두바이 악재'가 또다시 덮힌 것이다.

두바이발(發) 악재로 세계금융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유럽증시는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26일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3%대의 폭락세를 보였다. 우리 금융시장이 받은 충격은 이보다 훨씬 심하다. 27일 증시는 코스피지수가 전날보다 무려 4.69% 급락하며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120일 이동평균선(1,560선)도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도

전날 종가보다 20.20원이나 폭등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이 '두바이 쇼크'로 다시 한 번 패닉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해외발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난해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터널을 채 빠져나오기도 전에 또다시 두바이발 악재를 만나 제2의 금융위기가 닥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물론 이번 두바이발 악재가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충격이라는 시각이 우세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하겠다.

하지만, 정부는 '두바이 쇼크'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괴력을 철저히 분석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거나 예측하지 못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한국 경제가 제2의 금융위기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심잡고 희망업' 취업박람회

27일 광주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에서 광주시와 광주여성희망포럼 주최로 '어심잡고 희망업'이라는 주제의 미니취업박람회가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연차 게이트'

서감원의원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산업 회장으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감원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서 의원의 정산 C.C에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박 전 회장 등 증인 4명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박 전 회장의 비서 이모씨가 작성한 지출결의서를 보더라도 5천만원이 들어있는 소관백이 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원회 계좌를 통해 1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통화내역 조회결과 등을 감안해 볼 때 서 의원이 정승영 전 생산개발 사장으로부터 1인당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의원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불법 정치자금 규모가 6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란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연협뉴스

호남 고추·참깨 생산 급감

호남지역에서 올해 고추와 참깨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고추·참깨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를 포함한 호남지역의 올 고추 생산량은 3만 201t으로 지난해의 3만8천736t보다 22.0%(8천535t)가 감소했다.

이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 면적이 8.8% 감소한데다 고추 개화기(7월)의 집중호우로 병충해 발생 증가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10a당 수량이 지난해보다 14.5%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참깨 생산량도 5천252t으로 지난해의 9천905t보다 47.0%(4천653t)가 줄어 들었다. 참깨의 경우 재배면적은 28.0%가 증가했으나 개화기 집중호우와 일조시간 부족으로 수해·습해가 심해 10a당 수량이 지난해보다 58.9%나 줄면서 전체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

연협뉴스

“시군구 통합 생활권·인구 등 고려해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호남권 토론회

“광역시·도 존속하려면 정책 업무·목표 관리 집중”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27일 광주시청에서 마련한 권역별(호남권) 지방순회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회자들은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안완기 전북대 교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는 데에는 통합추진 시·군·구가 동일 생활권인가, 동일 경제·사회·문화권인가, 통합을 하면 효율성 증대 또는 발전가능성을 이룰 수 있는가, 통합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나 지역의 특수성, 인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현 광주일보 논설실장은 "광역시·도

의 폐지문제는 경제상황과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문으로 볼 때 비현실적 방안이라는 견해가 많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궁극적인 도착점은 광역시·도 폐지 문제의 논의"라며 "민약 광역자치단체를 존속하려면 광역자치단체의 단순 집행 규모를 대폭 줄이고 전략적인 기획능력을 높여 정책적인 업무와 핵심 목표의 관리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식 광주경찰청 사무처장은 "정부는 과거 도농 통합이 성공적이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는 측면이 많았고 행정의 효율성도 예초 기

때에 미치지 못하는 등 성과가 크지 않았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 문제를 다루는 여야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인호 조선대 교수는 "시·군 통합합은 주민 생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로 지역별로 1천명씩 여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지방의회의 가결만으로 통합합을 결정하면 대표성 논란과 지역 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통합합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미치는 파급 효과와 주민투표법(제8조)을 고려해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민권익위 이동 신문고, 장기 민원 해결사

4년 끈 목포 연산동 백련마을 택지 문제 해결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 신문고'가 때아 지역 내 장기 민원이 해결되는 건 줄 문제가 있지 않나요?”

27일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동 신문고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을 4년여 동안 질질 끌며 주민들을 힘들게 했나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역 곳곳을 돌며 주민 민원을 상담하는 국민권익위의 '현장 밀착형' 이동 신문고가 '장기 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목포 이동 신문고에는 7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날 가장 큰 성과는 4년을 끌어온 연산동 백

련마을 택지개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90가구 290명이 사는 백련마을 주민들의 농지에는 용해 1지구 24만 3천744㎡(공동주택 2천663가구)와 용해 2지구 42만 1천㎡(3천377가구)의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백련마을만 개발에서 제외되자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2006년 4월 토지주택공사와 목포시가 백련마을도 택지개발 지구에 포함하기로 합의했지만, 토지주택공사가 지금까지 합의사항을 계속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주부진하던 백련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현장에서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극적으로 해결됐다. /목포=이성진기자 sslee@

李대통령, 세종시 수정 국민에 직접 설명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밤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종시 수정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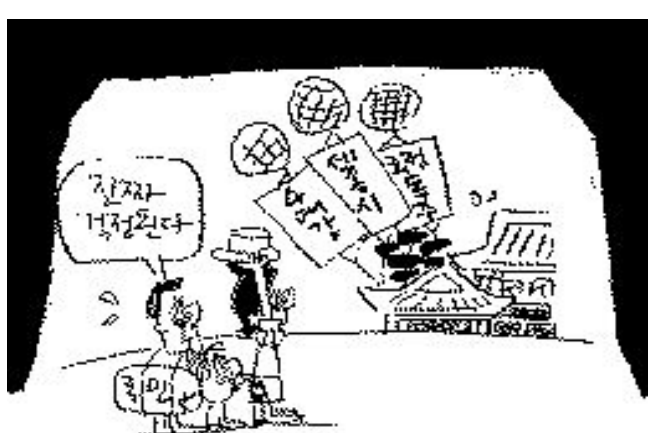
밤 10시부터 100분간 생방송 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 대통령은 2분간의 모두 발언과 토론을 통해 세종시 수정의 필요성과 대안 마련 계획 등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에 기

업, 연구기관, 교육 및 문화시설 등을 유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2007년 11월28일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가졌던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연협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그런 걱정 말고 애나 많이 낳으세요

광주시 평화공원 60억 조형물 설치 무산

시의회 행자위 예산 전액 삭감

광주시가 시청 앞 평화공원에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내년도 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가 평화공원에 광주를 상징하는 조형물 6개를 설치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1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명자 의원은 "100억원 이상이 소요돼 조성된 평화공원에 추가로 60억원을 들여 조형물을 설립하려는 시 계획에 위원회 소속 전원이 반대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일차

적으로 반영된 1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잠정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남아있던 하지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부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조형물 설치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조형물 1개에 1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에 평화공원에 조형물 1개를 설치하고 나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머지 5개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예고했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미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1부 2200-612	사건부 2200-691	조사부 2200-571	
<F A 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